

현안연구 2021

##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 당위성 개발

대전세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유병선

<요약>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



**연수원 건립의 탁월한 조건**

전문성	교통	지방분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강화 교육의 우수한 입지</li> <li>* 행정+교육+과학+4차산업혁명도시</li> <li>* 세계도시 네트워크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토에서의 용이한 접근성</li> <li>* 교통 요충지 (KTX, 고속국도, 항공 이동)</li> <li>* 편리한 시내 교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상징성</li> <li>* 중앙정치과 지방자치의 교차점</li> <li>* 수도권과 영호남 가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한 정주 환경</li> <li>* 수려한 자연 환경</li> <li>* 우수한 연수 환경 (시설, 견학, 휴양)</li> </ul>



**지방의정연수원 유치 전략**

컨트롤타워	협력 거버넌스	대전형 모형	우호 여론 형성
대전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브랜드화 전략	대전광역시 정-민-관-학-연 협력거버넌스 구축	대전형 스마트 의정 및 의정연수 모델 개발 및 보급	정치권-학계-전국 지자체 및 의회 우호세력 확보



**지방의정연수 패러다임 전환과 쇄신**

- 지방의정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교육연수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중앙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임
-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연수원 건립의 최적지인 대전광역시의 건립의 당위성 개발과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위한 조건과 환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 민주주의 주체인 지역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응한 연수 패러다임 설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 연수원의 특성상 교육훈련, 연구개발 그리고 휴양시설을 동시에 갖춘 도시형(또는 도시근교형)이 타당
  -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한 교통입지를 가진 지역
- 이상의 조건을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행정·교육·과학·스마트도시·세계도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최적지
  -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어 전국 지자체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높음

- 수도권과 영호남, 중앙과 지방정치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지방분권 달성의 최적지
  - 탁월한 정주 환경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도시
- 대전광역시는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대전광역시 전 구성원의 유치 노력을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대전 입지의 강점을 살린 브랜드 홍보 전략 마련
  - 대전광역시의회-행정기관-대학-민간기관-지역주민을 포괄하여 유치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및 정치권과의 공조체제 구축
  - 타 지방의회의 요구 파악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특히 직접당사자이며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과의 상호시너지 효과, 중앙 정부기관 인접성 등 대전입지의 탁월성 홍보에 주력하여 유치의 당위성 홍보
- 지방의정연수원의 부지로는 1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지방정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이것이 어려울 경우, 2안으로 최근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 이전한 관저동 구룡지구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목차 -

<요약> .....	ii
<목차> .....	v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3
4. 연구방법 .....	4
II.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의 필요성과 논의과정 .....	5
1. 건립의 필요성 .....	5
2. 건립 논의와 유치를 위한 전개과정 .....	9
3. 지방의정연수원 조건과 특성 .....	10
III.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의 당위성 .....	12
1.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적지 .....	12
2. 용이한 접근성 .....	17
3.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상징도시 .....	21
4.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	23
IV.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유치 전략 .....	27
1. 대전시의 주도적 역할 .....	27

2. 협력 거버넌스 구축 .....	28
3. 대전형 ‘스마트 의정 및 의정연수 모델’ 시행 .....	29
4. 우호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	31
V. 결론 .....	33
<참고문헌> .....	35

## 표 목차

<표-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	5
<표-2>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관련 조례 현황 .....	6
<표-3> 전라북도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논의과정 .....	9
<표-4>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의 정치학·행정학 학과 현황 .....	13
<표-5> 스마트도시 개념 .....	15
<표-6>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연구과제 .....	16
<표-7> 전국 주요 도시와 대전 간 이동 소요시간 .....	18

## 그림 목차

<그림-1> 대한민국 국토 중심 대전 .....	17
<그림-2> 교통 중심 대전 .....	18
<그림-3> 충청권 광역철도 .....	19
<그림-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1,2호선 및 BRT, 충청권광역철도 .....	21
<그림-5> 대전광역시 광역도시구상 .....	2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지방의정은 입법작용이라는 본질적 측면과 의정 수요자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이해와 가치 갈등의 조정, 지속적 정보공개와 신뢰를 통한 정당성 확보 등 민주적이며 통합적인 정치 활동임
- 최근 지방의회는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에의 적응, 정보통신 발달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정연수 패러다임 재설정 필요함
- 따라서 지방의정 연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의 가치와 방법과는 다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본질적 차별성, 주권자인 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능동적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한 전문성과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를 네트워크화하여 다층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인력 양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함
- 그동안 지방의정 관련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민간기관 등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교육이 단기적이며 1회성 연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

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업무보고에 지방의회 중앙연수원 건립 계획 반영 후 2022년 예산에 건립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전라북도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연수원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의제 선점 움직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 탐라대학교 부지 설치 노력 등 전국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정연수원의 대전 건립/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관련 용역 시작 전 지역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목적

- 지방의정연수원의 건립 필요성 요약
- 지방의정연수원의 대전 건립 당위성 도출
- 지방의정연수원의 대전 유치 전략 제시
- 행정안전부 용역 수행 전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부처 및 정치권 설득 자료로 활용

###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최용환(2014)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하혜영(2018)은 지방분권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교육장소와 관련하여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안, 국회의정연수원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안, 기존 공무원교육기관 중에서 다수의 기관을 특화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양성하는 안 등을 제시함
- 이동기·이성재(2019)는 전라북도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논리로 (1)전북이 그동안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여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교육연수훈련을 위해 전문화된 공공연수기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 (2)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지방의회의 역량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대안 기능을 수행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3)전북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어 교육연수프로그램 및 기법 등의 공동 활용, 유기적인 협력체계, 전문인력활용 등이 가능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지방의정연수원의 대전 건립의 당위성을 도출하

고 유치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됨

#### 4. 연구방법

- 문헌연구: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정리, 대전 건립의 당위성 도출을 위한 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 대전 건립의 당위성과 유치 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II.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의 필요성과 논의과정

### 1. 건립의 필요성

#### 가. 지방의정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표-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권한 강화	사무직원 인사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부여(단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규정 없음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제41조)
	의회 운영방식	회의 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에 상세 규정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제5장)
책임 강화	의원 겸직금지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등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등(제43조)
	지방의회 윤리심사	윤리특위 설치 임의 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등(제66조)
	의정활동 투명성	의회 표결방법 원칙 관련 근거 미비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제74조)
	정보공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정보 등 정부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제26조)

출처: 하혜영(2021)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지방의회 의원 현황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828명,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27명 등 총 3,756명임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표-2〉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관련 조례 현황

(2021년 8월 현재)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 일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1.6.30.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0.10.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0.12.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0.3.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2020.9.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2020.6.3.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2019.7.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0.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2019.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6.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9.7.10.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6.9.1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0.12.18.
경기도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7.17.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1.2.1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8.16.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 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2020.10.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6.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 현재 지방의회 연수 프로그램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민간기관, 자체연수(국내외 단기연수 포함) 등으로 지방의정 관련 교육훈련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부족함
  -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기관과 달리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없고,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 등 교육대상자의 수요 조사 및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의정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 임기 초반에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초선의원·보좌관·사무처 직원(순환보직 인사이동 다수)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직무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됨
  - 최근 민선5기~민선7기 지방의원 중 초선의원의 비율이 평균 60%를 상회하는데, 대다수 초선의원들의 경험과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지방의회 전문위원, 보좌진 및 사무처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부여함 (배귀희, 2019)

#### 나. 지방의정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

-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의정연수원은 부재함.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같은 공공연수기관과 민간 사설기관을 통해 이루어짐(하혜영, 2018)

- 국회의정연수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은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실시에는 한계를 지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군 소재) 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지방의정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 사설기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가 적고, 교육이 단기적이며, 1회성 연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하혜영, 2018)

#### 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교육 수요 증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됨
  -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수는 약 5,600명에 달함. 17개 광역의회는 전국 평균 103명이며, 226개 기초의회는 경우 전국 평균 17명의 사무처 직원이 있음(전국시도의회의운영위원장협의회, 2019)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 예상
- 2023년까지 지방의원 2명당 1명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현재 지방의원 의원정수는 3,756명으로 최대 1,878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신규 채용될 수 있음

## 2. 건립 논의와 유치를 위한 전개과정

- 제20대 국회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법률안(안)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2018.3.9.) 주요 내용
  - 지방의회의원, 사무직원 교육 및 연수 등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 지방의회의정원은 원장 1인을 두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의정연수원에 강의, 연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둠
- 전라북도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설립 논의

〈표-3〉 전라북도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논의과정

날짜	내용
2015.10.	전라북도의회·전북연구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2015.12.14.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2016.11.2.	전라북도의회, 지방의정연수원 대선공약 추진 검토
2017.3.2.	전라북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검토
2017.4.27.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결의안 채택
2017.7.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2021.5.1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센터 설립추진TF, 지방의원 전담연수기관을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치 움직임
  - 제주도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유

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 제주시의회는 제주 4.3의 평화와 인권 가치를 전파하며 제주도 서귀포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3. 지방의정연수원의 조건과 특성

○ 연수원의 경우 공간구성은 도시형, 도시근교형, 리조트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박훈 2018)

- 도시형은 일상업무와 관련이 깊고 교육 훈련시설과 숙박시설의 집약적 배치가 가능하며, 도시근교형은 접근 용이성과 상대적으로 넓은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리조트형은 도심에서 벗어나 빼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장기숙박형의 연수시설을 갖추는 것이 특징임
- 국회의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의정연수원’은 리조트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과천과 충북 진천에 위치하고 있어, 각각 도시근교형과 리조트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연수원 형태는 연수원 단독 혹은 연구원과 병합할 수 있음

-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특화된 연수원과 연구원을 함께 두는 것이 효과적임
- 전라북도 완주군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교육과 훈련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강원도 원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 내에 ‘지방의정연구센터’를 두고 제한적으로 지방의정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적화된 지방의정연수원을 위한 조건과 특성

-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수원을 건립해야 하므로 전국에서의 접근성,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 가능성, 교육훈련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갖춘 도시근교형(또는 도시근교형)이 타당할 것임
- 지방의정연수원과 연구원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입지,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한 첨단과학기술 접목, 각 분야 전문가 및 기관 연계 활용이 용이한 지역, 교육훈련과 휴양을 도시에 가능해야 함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이해조정자’로서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최적 환경 마련이 요구됨

○ 앞으로 지방의회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의회’<sup>1)</sup>운영 및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 ‘스마트의회’란 지방의회에 스마트행정을 도입한 것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이 쉽게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 의정보고,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의정소통시스템 구축, 의정업무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등을 의미함(송건섭 2018)

### Ⅲ.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 당위성

#### 1.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적지

##### 가. 행정도시 대전

###### ○ 정부대전청사

- 1989년 12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발족한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이 1990년 9월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일대에 정부기관 이전을 결정한 것이 출발점임
- 정부 대전청사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과 지방으로 배분하고 과밀·비대화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
- 입주기관으로는 감사원 대전사무소, 관세청, 국가기록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청사관리소,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통계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이 있음

###### ○ 세종특별자치시 인접

- 대전광역시는 인근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두고 있음
- 행정수도는 정치·행정기능의 이전을 의미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정운영 효율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세종시에는 2020년 5월 현재 43개의 중앙 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음

⇒ 이상과 같은 대전이 가진 행정도시의 장점과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세종시와의 인접성은 지방의정연수원 교육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및 체험학습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함

#### 나. 교육도시 대전

##### ○ 지역 내 대학 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및 연구 지원 가능

- 충남대, KAIST를 비롯해 관내 10개의 대학 교수진과 대덕특구 내 ETRI등 30여개 정부출연연의 풍부한 전문가 인프라 형성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의 정치·행정·법 계열 110명의 전문가를 활용 가능

〈표-4〉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의 정치학·행정학 학과 현황

학과	대학교명(교원 수)
정치학 관련	충남대(7), 대전대(2), 배재대(2), 한남대(8)
행정학 관련	대전대(8), 목원대(8), 배재대(6), 충남대(8), 한남대(9), 한밭대(8)
유관학과	대전대 법학과(7), 목원대 공공인재학부(8),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29)

#### 다. 과학도시 대전

##### ○ 대덕연구개발특구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전진기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첨단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의 거점 역



할 수행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 집적률을 보이고 있음. 입주기관은 공공연구기관 33개(정부출연연 26개, 교육기관(대학) 7개), 기타 연구기관 9개, 정부 및 국공립 기관 30개, 기타 비영리기관 26개 등임(2018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재인용)

#### ○ 대덕특구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

- 2018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 사업은 기존 도시에 첨단 스마트기술을 적용시켜 교통, 안전, 에너지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덕특구 일원에 생활밀착형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대전광역시는 ‘기가코리아 5G 사업’, ‘대덕과학문화거리 조성’ 등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전국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함(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자료)

#### ○ 4차산업혁명특별시

-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 네트워크,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재창조하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스마트도시는 지방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스마트행정에 대한 대전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됨

〈표-5〉 스마트도시 개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법률 제17945호, 2021. 3. 16., 일부개정]
유럽연합(EU)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국제표준화기구 (ISO)	도시와 관련된 사람들(거주자, 기업, 방문객)에게 서비스와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협력적 리더십 수단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시 운영 구성요소들과 도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와 통합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도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통신기술(ICT)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도시로 정의
Gartner	다양한 서브시스템 간 지능형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거버넌스 운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수행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떠오르는 ICT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지방정부 권한을 가진 명확한 주체(finiteentity)로 정의

출처: 서울 양천구 홈페이지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2/10205050100002019110601.jsp>. 2021/7/23.)

- 대전은 2017년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지능형 도시 대전 을 만든다는 비전을 세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편리한 도시를 목표로 함(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의 기술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연구기관과 2018년 4월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밀착형 연구 과제를 준비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스마트행정’은 정부기관의 정보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서비스 질과 양을 국민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소통, 참여, 공감은 그

원리로 함(송건섭, 2018)

〈표-6〉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연구과제

과제명	연구기관
도로이용 오염원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원
태양광발전량 서비스 플랫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터넷망 기반 소화기 관제 시스템	ETRI
IoT 기반 스마트 화재감지경보시스템	ETRI
센서 기반 도로·교량 점검시스템 구축	KISTI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특히 전 세계적인 COVID-19 대응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
-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드론/5G+무선통신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대전시,2020)

○ 세계도시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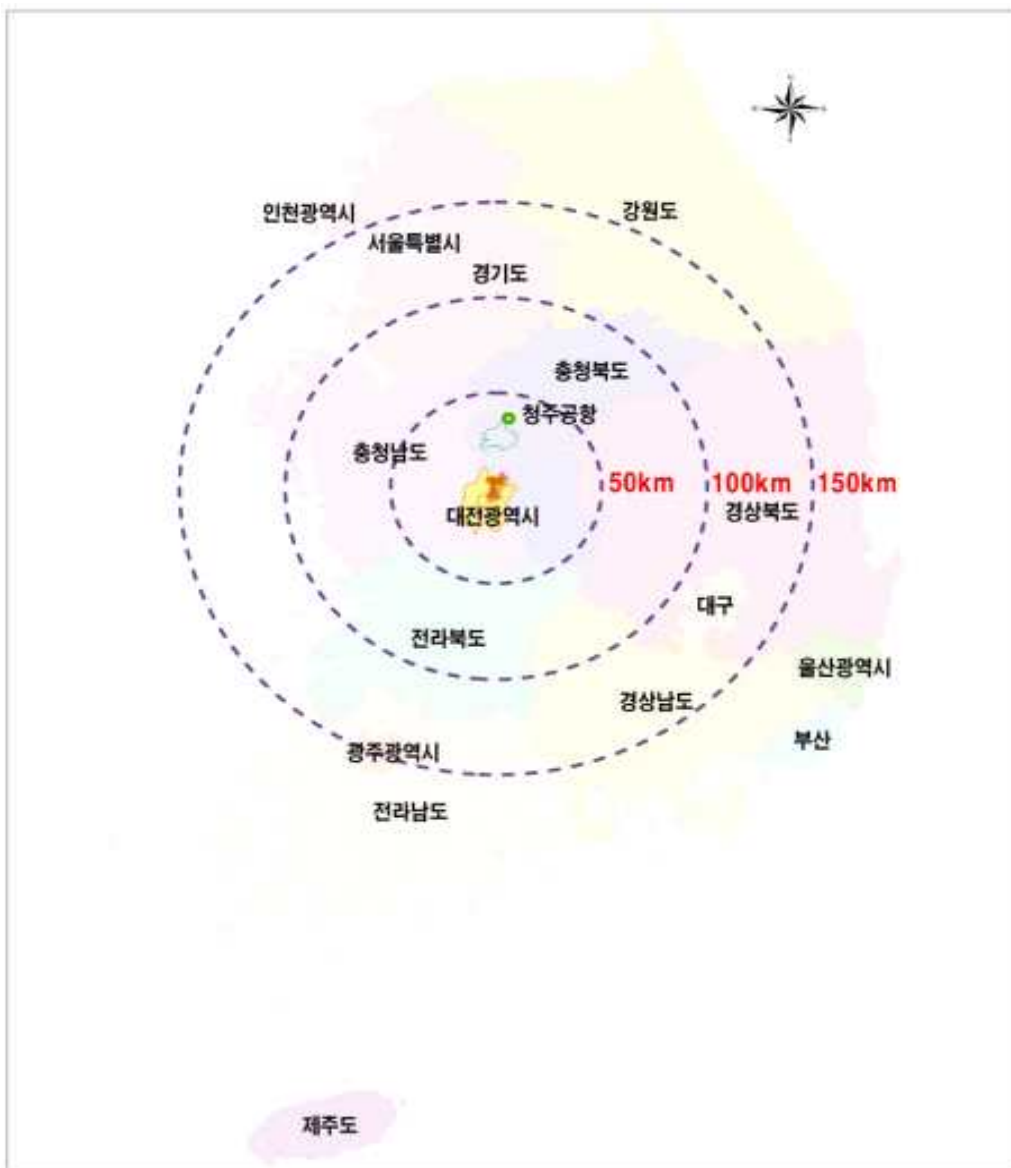
- 회원 140개국 250,00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자치단체연합 단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세계총회를 유치
- 2022년 UCLG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인프라 및 시민 참여 역량을 활용 가능하며, 지역을 벗어나 세계도시로서의 브랜드 및 위상 강화
-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 공통 의제 협의, 교류 협력 경험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방의 글로벌화와 지방외교의 경험을 확산하기 유리함

## 2. 용이한 접근성

### 가. 교통의 요충지

- 대전광역시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national territory, connecting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hinterland, serving as a transportation hub with the advantage of easy accessibility.

<그림-1> 대한민국 국토 중심 대전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검색일 2021/7/8..)

<그림-2> 교통 중심 대전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vestkorea.org/dj-kr/cntnts/i-934/web.do>)

-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소재지 및 주요도시에서 대전광역시로의 이동시간은 대부분 2시간 이내임

<표-7> 전국 주요 도시와 대전 간 이동 소요시간

구 분	대전⇄광역자치단체 의회소재지 및 주요도시 이동시간 (KTX, 고속도로, 항공 이용 소요시간)
수도권	서울(60분), 인천(110분), 수원(70분), 의정부(120분)
강원권	춘천(150분), 원주(130분), 강릉(180분)
충청권	세종(40분), 청주(70분), 홍성(70분)
영남권	대구(60분), 부산(90분), 울산(70분), 안동(130분), 창원(110분),

	진주(140분)
호남권	광주(80분), 전주(70분), 목포(130분), 순천(140분)
제주권	제주(160분, 항공, 청주공항)

\* 출처: 인터넷 포털 네이버(검색일:2021.07.20.)에서 각 시도 지방의회 소재 도시와 대전광역시 간 대중교통(철도\_KTX역소재지, 고속국도\_자차, 항공\_제주)소요 시간을 산출함

나. 광역교통 접근성 용이

○ 충청권 광역철도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중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 2023년까지이며, 2024년 개통 예정임

<그림-3> 충청권 광역철도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검색일 2021/7/8)

- 사업구간은 충남 계룡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까지이며, 총 35.4km로 청주공항까지 연장됨
- 정거장(역) 개량 및 신설 12개소 및 선로용량을 증설함

○ 대전-세종 BRT

- 대전~오송역까지 광역BRT 환승센터 건설(2023년 목표) 및 대전외 삼~대전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공사(2022년)

다. 편리한 대중교통

○ 교통인프라 양호

- 도시철도 1호선(판암역~반석역) 및 세종 연결
- 미래 교통인프라 추진 전략사업 진행  
: 도로 4개 사업, BRT 5개(광역BRT 1개, S-BRT 4개) 사업, 철도 5개 사업 등

○ 도시철도 2호선으로, 제2도시철도(트램) 추진(2027년 목표)

- 노선: 서대전역4~대전역~대동역5~중리4~정부청사역4~유성온천역 4~진잠4~서대전역4(본선 34.6km) 중리4~법동~동부여성가족원~연축차량기지(지선 3.2km)

<그림-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1,2호선 및 BRT, 충청권광역철도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검색일 2021/7/8.)

### 3.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상징도시

#### 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대전

##### ○ 명학소의 반봉건 항쟁

- 고려 무신정권 말기 정치가 혼란하고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계속됨. 1176년 공주 명학소(현재의 대전 서구)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농민과 천민들이 신분 해방을 주장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킴
-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을 띤 것으로 향후 신분제도의 변화에 자극을 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됨



## ○ 대전 3.8민주의거

- 1960년 3월 8일 2.28대구의거의 영향을 받은 대전지역 고등학교 1천여 명의 주도로 장면 야당 부통령 후보의 대전공설운동장 선거연설회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전시 일대에서 일어난 학생의거로 2018년 3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됨
- 1960년대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주요 중앙/지방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에 기여함
- 대구, 대전, 마산, 광주 등 연속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학생의 사회운동(지방의 정치행동)이 수도권 및 전국에 확대됨으로써 4.19혁명의 결실을 맺음

## 나. 시민주권도시 대전(민선7기)

### ○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대전 시민들의 참여 제도화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조례 제4328호, 2014. 8. 14.)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조례 제5630호, 2021. 6. 30.)

### ○ 시민 참여 사업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2021년 200억)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2,189건의 시민제안 접수(2021. 8. 18.)
- 대전 100년 도약을 위한 ‘대전형 뉴딜 10대 특화과제’ (2021. 4.) 선정 시 시민 참여

#### 다. 국가균형발전/지방자치분권 도시

- 국가균형발전/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세종시 건설에 대전/충청인들이 단결하여 이를 이루어 낸 경험이 있음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열망 지속
  - 2020년 9월 28일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 충청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하나가 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상호 연대·협력하기로 함(한국자치학회 2020)

#### 4.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 가. 친환경적 도시 생활 공간

- 자연재해가 적고 풍부한 산림·하천자원으로 친환경적 도시 생활 공간
  -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덕구가 전국 시군구 중 녹지 비율이 높은 군집지역으로 조사됨(국회 미래연구원, 2020)
-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지능형 물 관리체계 구축중

나. 광역도시 구상

○ 중부권 최대의 광역도시 인프라 확보

- 중부권의 수위도시로서 광역기능 수행
- 세종시⇔대덕R&D특구⇔충북 오창·오송과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 주변도시와 연계된 X자형 광역도시골격 구상
- 대청호와 외곽 산악축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 형성

<그림-5> 대전광역시 광역도시구상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으로서의 대전의 경쟁력

- 2021년 8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대상 혁신 기반 역량과 미래산업기반 역량평가에서 대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다. 살고 싶은 도시

○ 한국갤럽(2019)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은 ‘한국인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응답에서 4위를 기록함

○ 국회 미래연구연구원의 연구결과<sup>2)</sup>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높은 정주성을 보유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가 대전(52.4%)이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대전 동구(68.3%)로 나타남
- ‘우울증 경험률’의 경우에도 대전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4.2%)
- 대전은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대전 유성구는 범죄 안전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함
- 대전은 유아 1천 명당 보육시설 수가 19.4개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 국회 미래연구원은 8개 행복지표(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를 진행함

라. 혁신성장 선도도시

○ 대전광역시 ‘디지털!그린!지역통합!대전형 뉴딜’ 추진

- 허태정 대전시장은 “과학기술 집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시 4차산업혁명 특별시이자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2021. 7. 23.)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균형발전 뉴딜을 통한 지역 중심 균형발전 모델 제시

## Ⅳ.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유치 전략

### 1. 대전시의 주도적 역할

○ 공공기관의 대전 유치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 과거 열 곳의 혁신도시가 일정한 기능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터를 잡은 것과 다르게 새로 출발하는 대전의 혁신도시는 대전이 지향하는 방향 설정에 따라 그 특성이 규정되어질 수 있음(대전일보, 2021/6/8)

-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을 대체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 확정을 이루어 냈. 이들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대상 기관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대전입지의 강·약점과 보완 노력

- 대전입지의 강점으로는 전국 지방의회에서의 접근성, 국회 및 중앙정부(세종)와의 연계, 행정·교육·과학·휴양 등 복합 도시로서 시너지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대전은 대전광역시 및 시의회의 홍보 부족, 후발주자(전북 대비)로서의 약점, 스마트의회 및 의정연수프로그램 부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 의정연수 전문성을 강조한 브랜드 홍보 전략, 유치 당위성과 우호 여론을 위한 홍보 전략

을 마련해야 함

- 수도권·강원권·영호남권으로의 접근성과 중간지대라는 상징성, 국회 및 중앙정부기관 인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후보지를 구체화하고 제안해야 함
  - 지방의정연수원의 잠재적인 후보지로는 대전과 세종의 경계지역, 행정 및 정치정보의 연결 및 집적, 교통인프라, 지방분권 및 친환경 입지를 고려한 대전의 중심지역 혹은 연수원의 고유 역할을 고려한 대전시 유희부지(외곽) 등을 제시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2021년 3월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 대전 관저동 구봉지구에 이전함. 구봉단지의 유희부지 활용을 통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유치할 경우 이 지역을 교육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전력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발전 분야 전문 교육기관임. 부대시설로 교육연구동, 후생동, 기숙사동, 주차장, 실외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한국전력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는 이를 위해 서구 관저동에 15만5049㎡ 규모의 교육시설 용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함(뉴데일리, 2021/3/18)

## 2.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치권, 시민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대전시광역시의회-행정기관-대학-민간기관-지역주민을 포괄하여 유치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 (가칭) ‘지방의정연수원대전유치협력위원회’ 구성과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활동 전개
- 대전 및 인근 지역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참여 및 협력 유도
- 대전광역시의회, 5개 구의회 결의안 채택 필요: (가칭)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 촉구 결의안’
- 대전시의회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상징성 확보 노력
  - 자치와 분권을 위한 주민 참여 의정 실현
    - : 지역주민과의 직접소통, 정보공개, 주민발안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스마트의회 활성화
  - 국회(의원)와의 정책간담회, 국회의정연수원과의 협력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연합회와의 정기간담회를 통한 협력과 유치 의지 표명

### 3. 대전형 ‘스마트의회 및 의정연수 모델’ 시행

-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에서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 활동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대덕구 포함 전 지방의회로 확대
- 경기도 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방안’ (경기연구원, 2018)과 같이 ‘스마트의회’를 위한 정보화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가칭) ‘대전광역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플랫폼’ 구축



○ 전문적이고 특화된 ‘대전형 의정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대전광역시 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과 상임위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스마트의회, 주민자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전과 세종 등 인접지역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중앙행정부처가 망라된 전문가(기관)를 활용한 의정연수프로그램을 상시화하여 타 지방의회와 공유

4. 우호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 타 지방의회의 요구 파악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실 수요자인 전국 지방의회 구성원의 요구와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방안 마련
- 대전입지의 매력 요인 -대덕연구단지를 통한 미래산업과 첨단 과학과의 접목, 전국에서의 우수한 교통과 접근,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연계, 고등교육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성 활용, 계룡산·대청댐 등 뛰어난 자연환경에서의 휴양- 연계방안과 홍보 강화
- 특히 직접당사자이며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과의 상호시너지, 강원·영남권의 이동 편의성, 전라호남권 대응 국회 및 중앙정부기관 인접성 등 대전입지의 탁월성 전파
- 예상되는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수한 교통인프라(대중교통), 교육인프라(대학), 정주인프라(도시환경·휴양), 국회(이전 예상) 및 정부청사(세종)·정부3청사(대전)·국방관련기관(충남 계룡) 등 중앙행정부처와의 연계, 대덕연구단지(ETRI,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와 국책연구기관(KDI, 국토연구원, KAIST 등)을 통한 우수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가능

○ 2021년 ‘K-바이오 랩허브’ 탈락 반면교사

- 대전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양질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규모 국책공모사업 유치에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심.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데이터센터” (2019)와 “K-바이오랩 허브” (2021) 유치 실패사례가 있음
- 그 이유는 대전시의 행정역량 부재와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정치적 결정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범시민적 유치 열기가 부족했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2021년 ‘K-바이오 랩허브’ 를 최초 제안한 지자체의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선정에서 탈락한 사례를 통해 현재 지방의정연수원 유치의 기득권을 가진 전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실현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수도권 대상 지역균형 및 수도권·비수도권 상호시너지 효과 강조, 중앙정치권과 공조 노력, 지역주민 대상 유치 효과성과 당위성 전파가 필요함

○ 국가 균형발전의 상대적 소외지역

- 최근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정책 이래 정책적 시혜에서 제외된 지역임
- 세종시가 건설되어 대전시의 상생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세종시 유입 인구 가운데 대전시민이 가장 많아 세종시 건설이 오히려 대전시 발전

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세종시가 건설되었지만, 세종시 대부분의 유입인구는 서울이 아닌 대전지역의 주민임

- 또한 일부 공공기관이 대전으로의 이전이 있었으나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부각시켜 연수원의 대전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정연수원 벤치마킹과 국회내 우호 여론 형성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대전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및 해당상임위, 국회사 무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협력 필요
-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 학계의 우호세력 확보 노력 - 학술회의, 정책연구, 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전개해야 함

## V. 결론

- 신설될 ‘지방의정연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의회(의원 수 828명),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원 수 2,927명) 등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과 8,000여 명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지방의회는 헌법(제117조, 제118조)과 시민 참여의 토대에서 민주성, 공공성, 공정성, 통합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정의 실현을 위해 의회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정연수가 요구됨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법제화함
- 기존 지방의정 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민간기관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의정은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의 가치와 방법과는 다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본질적 차별성, 주권자인 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능동적 연결성,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를 네트워크화하여 다층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뛰어넘은 지방의정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민주주의 및 자치분권을 실현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대전의 유치 당위성은 충분함
- 대전의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 대전의 장점인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적지,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

한 교통 요충지, 지방분권의 상징성, 쾌적한 환경 조건 등을 강조할 수 있음

- 지방의정연수원 입지로는 세종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대전·세종 접경지역의 유희부지를 제시해야 함. 또는 최근 이전한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대전 관저동 구봉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대전 유치 전략으로 행정·교육·과학·휴양 등 복합 도시로서 시너지를 갖춘 지방의정 연수의 최적지 브랜드화 전략,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민관학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력거버넌스 구축, 대전형 스마트 의정 모델 개발, 정치권-학계-지방의회 우호 세력 확보를 위한 유치 노력을 전개해야 함

- 유치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논리와 한발 앞서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대전 의회-행정-학계-시민사회를 포괄하여 종합적·심층적 대응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전국이 이해당사자인 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필요하므로 대전지역 정치권(정치인)뿐 아니라 전국 자치의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2016), 「연구원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회 미래연구원(2020),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 김중세(2019), “지방자치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 법학연구 19(1)
- 대전광역시(2015), 「대전 그랜드 플랜」
- 대전광역시(2019),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 대전세종연구원(2021), 「중기부 이전 대체 입주기관」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2021-9(통권45호)
- 대전직할시(1990), 『한밭의 얼』
- 박훈(2018), “연수시설 단지의 계획특성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25권 제1호
- 하혜영(2018).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vol. 7
- 배귀희 외(2019),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시도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운영 개편방안」. 한국지방계약학회
- 송건섭(2018),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지방의회-주민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
- 이동기·이성재(2019), 「자치분권 시대, 이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ISSUE BRIEFING 2019 Vol. 191. 전주: 전북연구원
- 이정범(2020), 「대전의 미래교통정책 방향 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2019), 「광역의회와 의회사무처 실태진단 및 개선방안」
- 하혜영(2018),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Vol 7,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하혜영(202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09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자치학회(202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몽친 충청권 4개 시·도.” 『월간 공공정책』 180
- 뉴데일리(2021),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대전 구룡지구에 ‘등지’ ” (3월 19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자료

대전광역시(2020), 「디지털!그린!지역통합!대전형 뉴딜」 대전광역시홈페이지  
-STORY대전 (2020. 7. 23.)

대전일보(2021), “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지, 깜짝 기록 쓰나.” 「대전일  
보」 (6월 8일)

제주의소리(2021) “5년째 방치 탐라대 부지...” 지방의정연수원 유치하자  
“ 「제주의소리」 (6월 15일)